

‘1조원 폭탄’ 맞은 기아차 ... 10년만에 적자 전환 불가피

신의칙 적용 엇갈려 논란 ... 명확한 법제화 시급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전망

기아자동차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조 단위 금액의 ‘통상임금 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이르면 3분기부터 회계장부상으로는 수 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기아차 측은 당장 ‘즉시 항소’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악화와 향후 소송 대응책 마련에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통상임금 ‘1조원 폭탄’ 맞은 기아차 충격... 적자 전환 불가피=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지난 31일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경영악화는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즉시 항소에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기아차에 지급을 명령한 4223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통상임금으로 사측이 질 부담 잠정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물론 지급 시점에서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기아차가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모두 마련해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판결 시점(3분기)부터 이 예상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분기당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였던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1조 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기록이나 중국 판매 부진 등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7870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급감했는데, 통상임금 1심 판결까지 겹쳐 마침내 기아차는 2007년 3분기 이래 10년만에 영업적자로 전환될 위기를 맞은 셈이다.

◇‘신의칙’ 적용 엇갈린 시차 불시 여전... ‘통상임금 명확한 법제화 시급’=반면,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재계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판결에 험로가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 측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성락 노조 지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장기간 노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시작됐다”며 “오늘 판결이(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자 무원칙한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1심 판결과는 별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 수당 등 임금총액의 규모를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임에도 추가수당을 요구해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반된 논평을 내며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자체에 걸린 액수도 크지만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에 부딪힌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사측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상급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제계 “기업에 손해 감수하라는 판결” 허탈

경제단체를 비롯한 경제계는 물론 중소기업 업체까지도 이번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노사 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판결 후 “오늘 판결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3년 3월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55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슷한 시점인 201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과거 3년+향후 1년)을 최소 14조6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으로 계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더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개최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인영·송기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간사, 양정현 광주시장, 김갑성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균형발전 토대 위에 지방분권 이뤄져야”

광주 헌법개정토론회 관심 폭발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는 안된다”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국민 관심사다. ‘최순실 사태’ 등을 통해 사회 문제가 됐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촛불집회’ 등으로 결집한 ‘민주화 열망’도 담길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다.

반면, 과거 정부에서 예산 등 ‘호남 출대’를 받아 오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분권을 추진하게 되면 ‘곳간’만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년만의 헌법 개정 관심 폭발=지난 3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개최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기독교 단체 등 일부 시민들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 막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샀다. 토론회장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로 가득 찼고, 토론자들의 한 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분위기도 진지했다.

이번 헌법개정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여 년 만에 추진되고 광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표기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도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헌은 헌법가치를 강화하고 기본권 조항 개선, 지방분권, 재정·경제민주주의,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정부형태 개편, 선거제도 개선,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등 11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광주·전남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에 헌법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고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부정적 의견 때문에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올바른 5·18 의식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변수가 없다면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명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익부 빈익빈’식 지방분권은 안 돼=개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방분권이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지역은 더 못 사는’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자로 나온 광주시의회 김민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 2에서 6 : 4로 맞추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

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 정부의 재정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함께 보통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배분 비율을 올려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정책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시·도의 관련 예산을 삭감해 과거 SOC 예산 지원에 차별을 받아왔던 광주·전남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지방분권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 이영철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분권은 보다 나은 삶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정책 방안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최근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지방분권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둔 채 진행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균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정치구조 속에서 분권은 일률적인 지방분권의 축소화이며, 부익부빈익빈의 지방분권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20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보성소리축제

2017. 10. 20.[금] ~ 10. 22.[일]

제20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일정

흥과 멋의 우리가락! 아름다운 보성소리의 향연

- 일시 : 2017. 10. 21.(토)~10. 22.(일)/2일간
- 장소 : 다향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구분	예선	본선	경연장소	
판소리	대학및 일반부 명창부	2017.10.21.(토) 13:00 10:00 체육관 대기실(3)	2017.10.22.(일) 10:00	다향체육관특설무대
	신인부 학생부	2017.10.21.(토) 10:00 08:30 예술회관 로비	2017.10.22.(일) 11:00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고수	신인부 일반부 학생부 명고부	2017.10.21.(토) 10:30 09:30 전수관 야외부스(명고부는 11:30)	2017.10.22.(일) 10:00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7. 9. 1. ~ 10. 18. 18:00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및 대리 신청, FAX·우편·e-mail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참가비 : 없음
- 신청접수
 - 접수처 :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 우 편 :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 F A X : (061)853-2629 ※ 팩스신청자는 예산당일 경연순서추첨 30분전까지 사진 제출
 - E - mail : bs2629@hanmail.net
 - 접수안내 : (061)852-2621,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sori.boseong.go.kr

전국방랑곡곡 서편제 - KBS 국악한마당 방영

세계구석구석 보성소리 - 아리랑TV방송

축하드립니다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주최/주관 보성군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